

탄력근로제 개약 반대한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재시도 반대한다



김민재

IMF가 밝힌
세계경제
4대 먹구름

2면

· 탄력근로제 개약 반대한다
·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재시도 반대 좌파 공동성명

3면

2019년
세계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4~5면

문재인 정부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6면

처우개선
합의 파기한
파리바게트

6면

베네수엘라 위기와
트럼프의
쿠데타 사주

7면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

8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정선영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2월 10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경제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분쟁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를 세계경제 4대 먹구름으로 꼽았다.

최근 세계 지배자들은 경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세계경제가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윤율 저하 때문이다. 1970년대 전후 장기 호황이 끝나면서 위기는 반복돼 왔고, 이윤율 하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2008년 공황은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 침체 와중에 2011년 그리스 등 유럽발 부채 위기가 터졌고, 2015~2016년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며 신흥국 경제 위기가 벌어졌다.

최근에는 낮은 이윤율에 더해 높은 부채 문제와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이는 다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IMF 총재가 세계경제 4대 먹구름으로 꼽은 쟁점들은 현재 자본주의의 상황을 드러내 주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무역 분쟁

첫째, 무역 분쟁과 관세 인상은 제국주의 간 갈등의 심화를 보여 준다. 장기 불황 상황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타국에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책을 강화해 왔다. 근린공핍화(이웃 국가 거지 만들기)라고도 불리는 이런 정책은 2008년 위기 이후 심화돼 왔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더 공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쓰며 세계경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고 무역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휴전’ 기간에도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부회장인 멩완저우를 기소하고,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따라서 미·중 간에 일시적인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경쟁과 함께 군사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한편,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며, 유럽, 일본, 한국 등 전통적 우방국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최대 25퍼센트 관세 부과를 위협하며 자동차 수출국들을 압박할 전망이다.

이미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과잉 설비’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도요타와 GM, 다임러는 순이익이



파업 투쟁에 나선 르노삼성 노동자들. 지금 투쟁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구조조정 공격에 맞서는 데에도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전년에 비해 급감했다. 현대차도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47.1퍼센트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각국 자동차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GM이 북미에서 1만 4000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포드도 프랑스 아키텐 공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닛산·혼다는 영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줄이고, 재규어 랜드로버도 전체 노동자의 10퍼센트인 45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가는 자동차 기업들과 관련 국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각각 한국 22.7퍼센트, 독일 21퍼센트, 일본 21.5퍼센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200억 유로의 보복관세를 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또 영국과 독일 등은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反)화웨이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와의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란 핵합의 문제에서도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적 경쟁이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이어지는 추세는 강화하고 있다.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위험성은 앞으로 더욱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

둘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과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정치적 위기를 보여 준다. 유럽연합은 긴축 정책, 민영화, 규제 완화 등으로 유럽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로 탄생했다.

2016년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것은 신자유주의적 유럽연

합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과 유럽 지배계급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최근 영국과 유럽 지배자들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에 빠질 수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은 노 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 경제는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더 수축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로존에도 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최근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에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2011년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처럼 주로 유럽 주변부 국가들에서 위기가 터졌는데 말이다. 독일은 지난해 3분기 -0.2퍼센트 성장한 데 이어 4분기에 0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유럽 지배계급의 위기 상황에서 파시스트를 포함한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불길한 일이다. 유럽 좌파 내에서도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여러 혼란이 벌어진 것을 보면, 위기의 시기에 정치적 대안을 분명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2008년 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에서 중국의 기여도는 34퍼센트에 이른다.

그런데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모순이 드러난 사례이다. 중국에서도 투자가 급증하면서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즉 산 노동 대비 기계 같은 죽은 노동의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윤율이 줄어들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가 마이클 로버츠는 중

국 이윤율이 2004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해 왔다고 밝혔다.

2008년 위기 이후 중국은 막대한 빚과 정부 지출로 경기를 부양했다. 중국의 부채는 지난 15년간 15배로 늘었다. 그래서 최근 무역전쟁,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업 파산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물론 아직은 중국 국가가 개입할 여력이 있었지만 이 능력이 언제까지나 충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이 성장하고 있다. 중국노동회보(CLB)는 지난해 집계된 노사분규가 최소 1700건으로 2017년 1200건보다 500여 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정부는 저항을 강경 탄압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 때문에 억압적 통치의 정당성이 약화할 수 있다. 불평등과 모순이 심한 중국 상황에서 부패 문제 등 정치 쟁점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각국 정부들 금융 긴축 기조는 수정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가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금리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거나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값싼 이자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지만, 이는 이미 막대하게 쌓인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 위기를 지연시키면서 모순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다.

한국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 영업이익률이 4.79퍼센트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반도체를 포함시키면 2017년보다 상승했지만, 최근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

일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위기가기도 하다. 각국 정부와 우파들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다른 국가에게 돌리거나, 이주민들을 속죄양 삼는 방식의 고통 전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는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고, 체제를 변혁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주의자들은 경제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방향을 찾아 보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뽑아 내는 체제에서 경제 살리기는 결국 노동자 희생을 뜻한다. 임금·노동조건·일자리·정치사회적 권리 등 노동계급의 삶의 필요라는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하며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승리하려면, 투쟁적으로 운동을 성장시키는 것과 함께 정치적으로 투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투쟁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계급투쟁을 전진시켜 가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국경장벽 밀어붙이는 트럼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 5·18 망언과 정의당의 정치
- ★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우파 의원 일부 탈당 — 새로운 중도 정당의 시작?
- ★ 현지 활동가가 전하는 스페인 정치 위기
- ★ 김용균 사망 항의 운동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당기고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악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척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번 개악에도 합의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구실을 했다.

이번 개악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력화됐을 뿐 아니라 1년에 절반은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하게 됐다. 결국 문재인이 “노동시간 단축” 약속은 요란한 말 잔치로 끝났다. 최저임금에서도 ‘쪼다 뺏기’ 공격을 하더니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첫째, 이번 개악으로 사용자는 주 52시간제와 관계 없이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됐다. 입값이 몰릴 때는 **법정 노동시간의 한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탄력근로 기간의 앞뒤 3개월을 붙이는 식으로 6개월 연속 주당 64시간도 일을 시킬 수 있다. 노동부의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인 ‘12주(3개월) 연속 주당 60시간 노동’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번 개악으로 “합법 과로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둘째, 연장근무 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손실도 크다.**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임금이 평균 78만 원 깎일 것으로 전망된다(양대노총). 이번 개악이 임금 삭감 공격이 기도 한 것이다.



노동시간 공격이자 임금 공격인 탄력근로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 '저지'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합의 직후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논평을 내놔다. 그러나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사용자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해 지는데, 노동자들이 삶을 안정적으로 계획하거나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임금도 더 떨어져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도 불안정해진다.

보완책은 기만일 뿐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임금 보전’ 방안도 들어가 있다며,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고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으로 과로를 막을 수 없다.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더라도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이 허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이조차 무시할 수 있게 해 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시간 확정을 일별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다. 기존에는 탄력근로를 하려면 사측이 일별로 노동시간을 정해 놔야 했으나, 이번 개악으로 사측은 주별 노동시간만 정해 놓은 뒤 그때그때 일별 노동시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게다가 ‘기계 고장,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을 핑계로 사측이 주별 노동시간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놔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즉, 사측이 공문 한 장만 보내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임금 보전 방안도 사실상 사용자에게 백지위임했다. 임금 보전 방안을 마

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 놔지만, 구체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해 사용자가 대충 만들어도 된다. 설사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역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조직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이번 합의로 ‘사회적 합의’가 첫발을 떼었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개악은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답정네’(답은 정해

났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강요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결정됐을 때부터 정부와 사용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정부는 올해 2월 중으로 이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시기를 정해 놓고 합의를 압박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정부 정책의 추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갖고 보완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보완책들에서 보듯, 이런 방식은 개악은 막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부와 사용자들의 개악 추진에 정당성만 주는 꼴이 됐을 것이다.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여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조만간 개악을 위한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의원들이 내놓은 법 개악안이 올라가 있어서 절차에 돌입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들의 야합을 막으려면, 국회에서 개악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탄력근로 확대 개악 합의를 비판하면서, 2월 20일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와 3월 6일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루 파업으로는 개악을 막을 수 없다. 법 개악안 처리가 임박한 현 상황은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 ‘저지’를 위한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할 때다.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총파업으로 제 힘을 보여 줄 때, 저들의 개악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공동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결과를 인정하고 투쟁 중심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의 일부는 경사노위 참여안이 거부됐다는 것을 부정하고, 새로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주도한 좌파 단체들이 경사노위 참여 재시도를 반대하며, 민주노총 지도부가 약속한 투쟁 계획을 내놓고 투쟁을 즉각 전면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에 합의했다. 사용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정부가 강력히 밀어준 이 개악이 경사노위에서 합의 모양새를 얻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말로만 투덜거리다가 개악에 야합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이로써 경사노위가 답과 시한을 정해 놓고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다고 합리화하지만, 보완책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라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를 무산시킨 것이 완전히 올바른 모습을 보여 준다.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부 정책 추진의 들러리가 되

기를 거부하고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기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이 결과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탄력근로제 개악 등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작 확대해야 했다. 그럼으로써 탄력근로제 반대를 이슈화하고 장시간 노동에 신물난 노동자들에게 불만의 초점을 제공해야 했다. 경사노위 불참은 경사노위 야합을 방지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김명환 집행부는 방향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 대의원대회 말미에 위원장 자신이 “경사노위 참여를 빼고”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일부 산별

연맹 위원장들은 경사노위 참여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며 무리하게 경사노위 참여(안) 토론과 표결을 기어이 다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67차 대의원대회 결과 경사노위 참여(안)이 거부됐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 결과를 비판하는 언론들(〈한겨레〉나 〈경향〉 등)조차 그렇게 보도했다. 이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 공간을 뒤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부 간부들이 이런 시도를 지속한다면 민주노총은 훨씬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것이다.

김명환 집행부는 67차 대의원대회 결과 경사노위 참여가 거부됐음을 분명히 하고, 투쟁 중심 사업계획을 결의하기 위

한 대의원대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지금 당장 선포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에서 개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예정됐던 3월 6일 총파업 계획만 되뇌는 것은 안일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중집이 2월 21일 회의에서도 대의원대회 결과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지속한다면 조합원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대의원대회 결과를 옳게 인정하고, 정부의 각종 개악에 맞서는 투쟁을 즉시 전면화해야 한다.

2019년 2월 20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총장회동기회, 금속합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2019년 세계경제와 한국 노동운동

이 글은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국제연락처)사 뒀이 소속 단체 대의원협의회에서 한 발표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은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놓았다(필자 자신의 글,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과 강동훈·정선영 기자의 글들). 진자본주의 애널리스트·경제평론가의 대부분도 올해 경제 상황이 위기(자칫 경제 공황이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고비라는 데 동의하는 듯하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공황 직후 트로츠키는 경제 공황과 노동자 투쟁의 관계에 대해 매우 뛰어난 견해를 제시했다. 먼저, 트로츠키는 공황이 닥치면 계급투쟁이 자동으로 고양된다는 생각이 기계적인 사고일 뿐임을 강조했다. 물론 공황으로 노동자 투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운동이 자동으로 혁명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트로츠키는 순차적으로 고찰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제시했다.

(1) 먼저, 경제의 장기적 추세를 염두에 두고 경기 순환(호황/불황 주기)을 봐야 하고,

(2) 그다음, 폭넓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경제 불황을 봐야 한다. 그래서 제국주의, 정치 체제, 정당 정치의 위기, 특히 노동계급 의식과 투쟁성이 경제 불황과 관련되는 방식을 봐야 한다. 위 요점을 차례차례 살펴보자.

추세와 순환의 구별, 그리고 합성

(1)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순환(불황/호황 사이클)을 구별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자신이 직면한 1920년대 호황을 마르크스가 《자본론》집필 구상 초기에 경험한 1850년대 호황과 비교하며 분석했다. 1850년대 호황은 장기적 호황의 출발점이었다. 당시 자본주의 호황은 1873년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1920년대는 자본주의 경제의 쇠퇴기였다. 그러므로 호황은 잠깐이었고, 불황은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더 깊어졌다.

이런 분석 틀로 우리 시대를 살펴보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는 두 번의 장기적 발전 단계를 경험했다. 1940~1973년 자본주의는 사상 최장기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불황은 단기간이었고, 심각하지도 않았다. 반면 결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됐다. 이윤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생활수준도 향상됐다.

그러나 1973년 이후 성장률은 꾸준히 낮아졌고 불황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공격해야 비로소 이윤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심각성의 정도는 서로 달랐지만, 1973~1974년, 1979~1981년, 1991~1992년, 1998년, 2001년, 2008~2009년 공황을 경험했다. 2008년 이래로는 경제 침체가 지속됐다. 이 침체는 오랜 저성장 끝에 닥친 것이다.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

(2) 이제 경제 침체 상황과 정치 상황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자. 전후 장기 호황이 1973년에 끝나면서 정치도 크게 변했다. 점점 취약해지고 있던 경제는 설상가상으로, 1989/91년 옛 소련 블록의 몰락과 냉전 종식 이후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점점 더 자주 전쟁이 일어났다. 이는 제국주의 체제를 떠받쳐야 했다. 경제 침체는 이런 제국주의적 갈등을 점점 더 악화시켰다. 특히, 미국이 자기 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자기의 여전히 우월한 군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서구의 경우,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북지국가가 확장되던 호시절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종말을 맞이했다. 한국의 경우 그런 호시절은 1997년 이후 끝났다. 서구에서 케인스주의를, 한국에서 발전주의를 대신해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경제 이데올로기가 됐다. 그리고 북

지국가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더욱 강화됐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우리는 20년간 규제 완화, 민영화(사영화), 노조 억제 정책들이 노동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정치인과 정치 체제 전반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군사 독재 후신 정당(여러 차례 당명을 바꾼)과 실천상으로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회의론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런 정서는 특히 최근 문재인에 대한 실망을 낳고 노동운동이 고양된 덕분에 널리 확산됐다. 이 점은 김영환 민주노총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가 시도 가 노동자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

물론 경제 위기에 직면해 정치 상황 전개가 언제나 좌경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소생은 경제 침체가 노동계급의 대도가 양극화한 일부는 시스템의 붕괴를 비난하고, 일부는 시스템의 회생자를 비난한다 — 을 보여 준다. 경제 위기 때마다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누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내놓는가를 둘러싸고 좌파와 우파 사이의 경쟁이 벌어진다.

이런 경제 위기는 노동계급의 대부분이 현 경제·정치 체제에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에 대한 명료한 정치적 견해를 내놓는 동시에, 불황의 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정치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포퓰리즘 — 좌와 우

필자가 2015년 말 민중대회로 드러난 한국의 포퓰리즘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을 때 세계 곳곳에서도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대부분 미국에서 트럼프의 부상,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의 부상,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과이도의 부상도 마찬가지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최근에는 스페인 좌파 포퓰리즘 정당 포데모스의 이데올로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 출판됐다(상할 무베,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이승원 옮김, 문학세계사, 2019).

어떤 영역사전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이렇게 정의된다.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와 편견에 계획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 여기에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예가를 가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중 부패한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곤 나머지 국민이 계급을 가로질러(여러 계급을 포함해) 단결해 집권한다는 전략. 2016년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결정케 한 국민투표의 다수 찬성표 표심에는 포퓰리즘 정당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랑스의 국민전선(FN), 이탈리아의 동맹당(Liga)과 오성운동(M5S),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스웨덴의 스웨덴민주당(SD),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O), 헝가리의 요비비크(Jobbik), 폴란드의 법과정의당(PiS) 등도 포퓰리즘 정당들이다.

방금 언급한 포퓰리즘 정당들은 모두 우익 정당들이다.(그중 프랑스의 FN과 오스트리아의 FPO, 헝가리의



김용균대책위 사례는 민중주의와 급진 노동조합주의의 상호작용인으로는 불충분함을 보여 준다

Jobbik은 아예 파시즘 정당이다.) 이 우익 정당들은 2008년 이후 저속매 온 세계경제 침체와 중도파 정당들의 배신의 수혜자로서 성장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부상,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의 부상,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과이도의 부상도 마찬가지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국에서 박근혜를 퇴진시킨 운동이 일어난 지 겨우 두 해 만에 우익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경제 위기와 중도파 정치인 문제인의 배신이라는 같은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포퓰리즘은 아예 파시즘 정당이다.) 이 우익 정당들은 2008년 이후 저속매 온 세계경제 침체와 중도파 정당들의 배신의 수혜자로서 성장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부상,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의 부상,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과이도의 부상도 마찬가지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제인의 배신의 수혜

좌파가 아니라 우익이 수혜자인 건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노동계급은 2008년 공황이 들이닥치고 처음에는 공황에 대한 설명과 해결을 조직 노동자 운동과 좌파에 의지했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은 곳곳에서 광장 점거와 거리 시위로 점철됐고, 영국과 몇몇 유럽 나라에서는 공개한 국민투표의 다수 찬성표 표심에는 포퓰리즘 정당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랑스의 국민전선(FN), 이탈리아의 동맹당(Liga)과 오성운동(M5S),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스웨덴의 스웨덴민주당(SD),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O), 헝가리의 요비비크(Jobbik), 폴란드의 법과정의당(PiS) 등도 포퓰리즘 정당들이다.

이 이유로는 첫째, 노동계급의 투쟁이 우익 반동을 제압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

적인 이유이다. 둘째, 노동정치가 1930년대와 다르다. 1930년대에는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이데올로기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으로부터 계속 대중적 선거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파시스트들이 이들 노동계급 정당들로부터 표를 빼앗아 가는 것이 제한될 수 있었다. 반면 오늘날 공산당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시피 하고, 사회민주당 주류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데다 개혁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었던 탓에 대중의 분노와 불신을 받고 있다. 덕분에 파시스트들을 포함한 우익 정당들이 기득권층에 반대한다고 사람들을 포퓰리즘으로 기만하면서 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강화된 제국주의이다. 심각한 경제 위기는 양극화를 낳고, 정치체제의 개편을 압박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도 강화한다. 이미 이라크 전쟁의 광장 점거와 거리 시위로 점철됐고, 영국과 몇몇 유럽 나라에서는 공개한 국민투표의 다수 찬성표 표심에는 포퓰리즘 정당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프랑스의 국민전선(FN), 이탈리아의 동맹당(Liga)과 오성운동(M5S),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스웨덴의 스웨덴민주당(SD),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O), 헝가리의 요비비크(Jobbik), 폴란드의 법과정의당(PiS) 등도 포퓰리즘 정당들이다.

이 이유로는 첫째, 노동계급의 투쟁이 우익 반동을 제압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



반면 교사 브라질의 극우 대통령 보우소나루 당선은 노동자당(PT)에게 책임이 있다

서는 1996년 말 노동법 파업 이래 20년 만에 노동계급이 부패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포퓰리즘적 운동의 추진력이 됐다. 그 덕분에 그 운동이 진보성을 띠었고(진보적 포퓰리즘, 즉 민중주의), 노동계급도 그 운동에 의해 고무돼,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있다. 물론 새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도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해, 애초에 진보적 포퓰리즘인 민중주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즉, 박근혜와 당시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패거리들을 제외한 국민(민중)이 계급을 가로질러 단결해, 그 부패한 패거리들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국민(민중)의 이익과 정서에 민감한 정부를 세우

민중주의와 급진 노동조합주의의 상호작용

민중주의와 급진 노동조합주의 사이의 이러한 동요 또는 결합에 대해서는 이 글 첫머리에 언급된 필자의 글에서 논의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목격한 이 현상은 바로 김용균 씨 사망 추모 집회에서 드러난 김용균대책위 활동가들의 방침이었다.

아쉽게도 우리 단체의 김용균대책위 파견자들은 급진 노동조합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주장(노동조합이 운동을 주도하라는)들과 제안을 했던 듯하다. 필자는 위 언급된 글에서 한국 등 신흥국 노동운동가들이 민중주의와 급진 노동조합주의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속에서 흔히 개혁주의로 기울어진다고 지적했다. 그 글에서 필자가 언급하지 않은 점 하나는 남아공이나 브라질의 혁명가들도 자주 민중주의의 대(對) 급진 노동조합주의 프레임에 갇혀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다. 김용균 씨의 비극은 조직 노동자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가 알려 주듯이,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노동계급 사람들과 서민층 전체를 위태로운 환경 속에 놓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주의적 전술은 이윤 시스템과 차별(단지 비정규직뿐 아니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의 운동으로 동원할 구조와 조직 방법을 포괄해야 했다.

김용균 씨 사망 추모 집회의 주도권은 처음에 ‘자연스럽게’(조직 노동계급의 성원이라는 김용균 씨의 신분과 사망 원인에 비해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떨어졌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개혁주의적이라는 점은 혁명가들이 두루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 활동가들조차 정치 영역에서는 자주 지도자들과 함께 개혁주의로 기울어진단. 우리는 왜 노동조합에 그런 경향이 있는지는 그 자체 방식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주장과 제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 조합 지도자들은 파업만큼 합의 집회에도 큰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또한 그들이 모두 문제인 정부를 우파 정당들로부터 지키는 데 연연한다는 것은 참말이 아니다. 이 점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내에서 경사노위 문제를 놓고 다수 성원들이 격렬하게 참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의 약점인 경제주의와 부문주의를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구현한다. 경제주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같은 개혁입법은 법률가 출신 진보계 국회의원(불행히도 민주당도 진보계로 여겨지고 있다)이 해야 할 몫이고 노조 지도자 자신은 사용자와의 협상을 담당한다는 접근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문주의는 김용균 씨 사망이 전체 노동계급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그의 소속 노조인 공공부문(나중엔 더 축소돼 발전부문으로, 심지어 그중 연료·환경설비운전부문)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용균대책위 사례

경제주의와 부문주의 못지 않은 노조 지도자들의 문제는 민중주의이다. 이는 민중주의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를 중재하는 협상 전

문가로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중간계급 지향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때문에 노조 지도자들은 자연히 주요 NGO 지도자들에 우호적이 된다. 공공운노노조와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김용균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에는 이런 맥락이 있다. 더구나 참여연대가 현 정부의 주요 지지 세력임에도 말이다.

민중주의의 핵심 문제점은 ‘민중 연대’(요즘은 ‘사회적 연대’라고도 한다)가 중간계급(특히, 자영업자층)을 반드시 포함한여려 계급에 걸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다른 계급을 향한 지배적 영향력)와 이것의 전제조건인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이 실종된다. 이는 처음에 산안법이 개정됐을 때 유족이 개정의 ‘진보성’을 착각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노조 지도자들이 을사 출신 ‘진보계’ 의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개정을 분석해서 비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주의와 부문주의와 민중주의는 모두 결국에는 개혁주의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김용균대책위 공동대표단이 산안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하고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할 소제 규명, 책임자 처벌 문제 제는 후순위로 돌린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더 키우는 데 충분한 열의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도 설명해 준다.

맺음말

필자는 우리 나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브라질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철저히 의식하게 되기를 염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브라질에서 극우적인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선 것은 압도적으로 정임 대통령 톨라와 호세프의 노동자당(PT) 정부가 책임자야 한다. 톨라-호세프 PT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시행한 주제를 뇌물 수수 등 부패 범죄를 저질러 브라질 사회를 총체적인 냉소와 사기저하, 이기주의,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브라질의 살인사건은 대개 마약과 관련된 건데, 연평균 피살자 수가 시리아 내전 연평균 사망자 수와 거의 같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는 보우소나루 같은 극우파가 충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보우소나루는 1964년부터 1985년까지 브라질을 강권 통치한 군부 독재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좌익에 대한 고문과 노동자 권리 유린, 투쟁적 노동조합의 탄압을 옹호하고 있다. 비록 보우소나루와 그가 이끄는 사회자유당이 파시스트 정당은 아니지만 브라질 노동계급의 적 같은 소수도 이 극우파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히, 브라질이 경제 규모 세계 8위, 군사력 순위 세계 14위인 준강국인 점에 비해 보면 이 사실은 가버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호세프 사임부터 보우소나루 집권까지 미제우 테메르가 대통령으로 있던 2년 반의 과도기에 PT 왼쪽의 브라질 좌익은 뭘 했는가고, 이 문제는 그들이 PT 집권기에 뭘 하고 있었는가로 연결된다. 필자가 2005년 포르투 알레구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했을 때 눈여겨본 PT 왼쪽의 좌파들은 종파주의나 중간주의 경향을 드러내면서 PT의 민중주의(진보 포퓰리즘)를 어떻게 다룰 줄 모르고 있었다.

PT의 진보 포퓰리즘은 2010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포퓰리스트인 테메르가 PT 후보 호세프의 러닝 메이트로 활동해 2011년 1월 1일 부통령으로 취임했고, 2016년 8월 31일 호세프가 브라질 상원의 탄핵을 당하면서 정식으로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일로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2005년 이후 노무현에 대한 환멸이 노무현과 비슷한 부류로 비쳐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안겨 줬, 노무현 환멸의 반사이익을 2007년 이명박이 챙겼음을 기억하고 있다.

혁명적 조직

문제인에 대한 환멸을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홍준표 따위의 우파 정치인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노동자 운동이 문제인을 선포하기 비판하면서 정치 지형을 왼쪽으로 기울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자 운동이 투쟁적인 동시에 정치적이 되어야 한다. 민중주의 전략과 급진 노동조합주의의 운동(전략이 부재한 단순한 운동일 뿐임)의 변증법으로는 현재의 노동운동을 이런 노동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투쟁이 시사하듯이 좌파가 강력해야 노동조합 운동도 좌파적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과 그 조직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노동조합 외에 정치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의당과 민중당이 그런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과 민중당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정당들보다 나은 (혁명적) 정치조직이 건설돼 그 정당들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관계(공동전선을 포함해)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조합 운동을 급진적·투쟁적으로 만드는 일과 혁명적 좌파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이 일이 쉽사리, 또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와 주요국들의 정치 위기, 그리고 트로츠키가 말한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무한정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김문성

여권의 “대한민국 100년” 띄우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기념 사업,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반영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도 들려온다.

집권 첫해인 2017년 1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또한 현 여권은 단지 100주년만 겹치는 게 아니라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지난해 3·1절 99주년 기념식에서 한 대통령 기념사를 보자.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 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우리 선조들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민주공화국”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 걸 덧붙이면, 민주당이 바로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김구 노선의 임시정부 계승을 표방



민주당은 3·1운동 계승 세력 자처할 자격 없다 2월 22일 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위 출범식

해 왔다. 1955년에 창당한 민주당의 첫 대통령 후보가 충칭 임시정부 내무부장 출신인 신익희였다. 제헌 헌법과 현재의 헌법(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이 3·1운동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인식의 귀결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3·1운동을 “3·1 혁명”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이른바 “3·1운동 정명(正名, 이름 바로 짓기)” 운동이다. 국무총리실,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등 여권 핵심부가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운동이 민주공화주의를 지향했다는 주장, 운동의 거족적 규모, 임시정부와 이승만 등도 이미 3·1운동을 그렇게 호명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1운동 참가자 규모는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당시 한반도

인구가 1600만 명이었으니,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민족해방 항쟁에 나섰던 것이다.

“3·1 혁명”론은 일종의 민주당판 항일 민족주의 운동을 창조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스토리에서 대한민국을 기획한 건국 세력이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한국 국가의 형성을 역사적으로 대표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는 이명박과 박근혜 우파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1948년 건국절(8월 15일) 담론에 대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파의 1948년 건국론은 한국 국가가 1948년 냉전 경쟁의 한복판에서 미군정 도움으로 수립됐다는 것이다. 친미 노선, 냉전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통치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원도 1948년에 이식된 제도들(3권 분립, 보통선거

권 등)에서 찾게 된다.

정리하면, 민주당의 “대한민국 100주년” 캠페인은 “대한민국 중심정당”이 되려는 포퓰리즘 프로젝트이다.

통념상 3·1운동은 민족적 화합과 단결을 연상시키는데, 이 캠페인의 결론은 그 단결의 구심이 민주당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은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남북화해 노선이나 사회적 대화 노력과도 연결된다. 공식정치 안에서 민주당의 주요 경쟁자인 한국당과 우파를 친일 계승 세력으로 치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3·1운동은 민주당의 전유물이기는커녕 위대한 저항의 전통이자 민중 봉기의 역사다. 이 위대한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민족항쟁은 그 규모와 격렬함, 성격 때문에 이후 한국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의 젖줄이 됐다. 반대로 임시정부는 갈수록 편협해진 우

익적 성격과 분열, 부패 등으로 3·1운동 계승을 말하기엔결맞지 않고, 후세대가 보고 배울 것도 없다.

따라서 반자본주의적·반제국주의적인 노동자 대중 운동을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후세대로서 3·1운동을 진정으로 기념하고 계승하는 일일 것이다.

위선 프로젝트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 시도 등을 지지해 온 민주당이 반제국주의 운동을 계승한다는 것도 남사스럽다.

민주당에게는 민주주의와 반(反)우파 전선에서 일관했던 역사도 없다. 애써 구축시켰던 전두환·노태우를 풀어 주고 대접해 준 게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지하게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것 같지도 않다.(김경수·서영교·손혜원 등이 국회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돼 있어서 더욱 그렇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이 되기 위해 자신들이 한국당보다 효율적인 친기업 정부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해 왔다. 노골적인 자본주의 정당들 간의 협치를 강조해 온 것도, 박근혜가 못한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 개악을 강행 처리한 것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였다.

이른바 ‘민생법안(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개악 등 친기업 법안들의 코드명)’ 처리를 위해 빨리 임시국회를 여는 데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다.

따라서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위선적인 반(反)우파 캠페인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위선에 속지 말아야 한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자회사 합의 1년 만에 투쟁

자회사 방안의 문제점 다시 드러나다

김지윤

파리바게뜨 노조가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2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직고용됐다. 그러나 1월 31일, 노동자들은 사측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문제는 2017년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빵기사 5000여명의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폭로하면서 공론화됐다. 얼마 뒤 파리바게뜨 노조가 설립돼 본사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SPC)는 자신이 지분 51퍼센트를 갖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제빵기사들을 직고용하고,



1월 31일부터 시작된 본사 앞 천막 농성

체불임금 지급, 노사협의체 운영, 3년 내 본사와 동일 수준 임금 적용 등을 약속했다. 합의가 적용된다면 노동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기

대가 컸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 후 노동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불법파견에 따른 사회적 합의 이후 1년, 바뀐 것은 회사 이름뿐! 5300여 제빵·카페 기사들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 하고 분통을 터뜨린다.

임종린 지회장은 조합원 월급이 오히려 20만~30만 원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3년 내 같은 본사 기사들과의 동일 임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월평균 휴무일은 5~7일에 불과하다. 한 노동자는 “52시간 맞추는 것만 급급해서 휴무가 휴무가 아닌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 52시간제에 맞춰 노동시간을 줄이면 인력을 늘리고 임금은 보전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합의문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징계하기로 했지만, 징계는커녕 그중 일부는 진급을 해 노동자들의 화를 돋웠다.

사측은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가 대표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대며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과 한 단체교섭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도 비민주적이라고 지회는 비판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사측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 속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눈치를 보며 자회사 고용에 합의했지만, 이제는 문제인의 친기업 우경화에 자신감을 얻어 이토록 뻔뻔하게 나오는 듯하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상황은 자회

사로의 고용이 비정규직 문제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미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SK브로드밴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이런 점을 보여 줬다. 투쟁을 선언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정의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정미 대표 측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사측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합의 주제로 참여한 정의당 으로서는 유감스럽다’며 향후 노조와의 면담 등을 거쳐 대응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국회에서의 지위를 활용해 나선다면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 투쟁

대량 해고에 맞서 연대 확대돼야

김어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분노의 강사들' 간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임순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부터 올 초까지 대학 시간강사 약 2만 명 이상이 해고됐다. 7만 6000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해고된 셈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이 맡아 온 강의는 전임교수들과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객원·초빙대우·객원 조교수 등에게 넘겨졌다.

강의 폐강,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 증가도 시간강사 대량 해고의 결과다. 규모가 작은 지방의 한 사립대학은 모든 교양 강의가 온라인으로 대체됐다고 한다('분노의 강사들'에 제보한 시간 강사들의 설문 응답 중). 아주대학교는 학부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현대인의 정신 건강' 교양강좌의 오프라인 수업을 폐강했다. 여러 대학에서 전공선택 과목도 격년제로 개설돼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돈이 많은 대학들도 강사를 해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도 총학생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학부생 대상 강의가 200개 이상 줄어들었다. 재단적립금 4000억 원을 쌓아 놓은 고려대학교의 경우 개정 강사법 적용 시 추가 비용이라는 55억 원도 고려대 연간 총수입의 0.8퍼센트에 불과한 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방조·묵인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월 말 대학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부각한다면서도 '전임교수 강의 시수 제한' 같은 규제책은 입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유은혜는 '시간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

련한 예산은 겨우 288억 원이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산한 예산 3000억원의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이쯤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만하다. '강사법 적용으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대학은 왜 시간강사들을 해고하지 못해 안달이고 교육부는 이를 묵인하는 것일까?'

지금 각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올해부터 대학 입학생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고3 학생 수는 57만 661명이었으나 올해는 51만 241명으로 감소한다.

또 지금 시간강사 대량 해고는 대학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수익형 교육기관'으로 만들려는 한국 자본과 국가의 지배 전략과도 관련 있다. 그리 되면 학문과 이론은 더욱 더 주력 산업을 위한 실용적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조직화, 투쟁, 연대

대학들은 강사들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고용 안정 보장과 교원 지위 부여조차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방학 중 임금 지급이나 4대 보험, 퇴직금 관련 비용만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교육부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많은 시간강사들이 자포자기하고 학생들의 반발도 크지 않다면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에 손을 댈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계속해서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비정규직 교수들은 8월 강사법 시행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5~6월에 더 큰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닥칠 거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강사들은 어

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금부터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대다수의 시간강사들은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적절한 구심을 찾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 강사들은 스스로 불만을 제기하고 동료 시간강사들과 그 분노를 나눌 통로조차 사실상 없었다. 이제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나서야 한다.

나는 매일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해고 이후 울분과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우리가 잉여 인간이었냐', '왜 그토록 열심히 일했나 싶다' 하고 분노하고 있다. 최근 투쟁하기 시작한 시간강사들의 모습을 언론에서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도 많다. 새롭게 투쟁에 나선 대학 시간강사들은 분노는 높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동료들에게 한교조로 가입해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면서 투쟁의 중심점 구실을 해야 한다.

더 많은 수도권 지역과 국립대와 사립대에서 더 큰 해고를 막을 수 있는 한교조 분회들이 건설되기를 바란다.

둘째, 한교조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학과 정부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한교조의 어깨가 무겁다.

셋째, 한교조, 강사구조조정 반대 공대위, 교수노조 등과 학생들과의 연대 확대가 중요하다.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크다. 강사들이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며 연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3월 23일 서울 도심에서 강사 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주체 결의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베네수엘라 위기

중대한 갈림길에 서다

김준호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이 중대한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2월 23일을 기해 국내에 반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과이도는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정부 하에서 베네수엘라가 가난해졌으며, 서방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 낼 수 있는 자신 이아말로 정당한 통치자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매점매석과 투기를 일삼으며 베네수엘라 경제의 파탄에 일조한 우파가 ‘인도주의’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우파가 미국의 물품 반입에 성공한다면 마두로 정부는 국경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친미 우파가 지배하는 콜롬비아의 무장 세력들은 베네수엘라 우파와 연계해 잔혹한 폭력 행위와 테러를 저질러 왔다.

물품 반입이 저지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을 빌미로 미국을 필두로 한 열강의 공세가 마두로 정부에 퍼부어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를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부의 씨를 말리려 으르렁대고 있다.

트럼프는 2월 18일 마이애미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미국인들을 상대로 연설하며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니카라과·쿠바에서도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앞날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으러댔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군부도 공격했다. “그들이 누군지 알고 그들이 숨긴 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안다. … 과이도 대통령의 사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트럼프는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2월 15일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 사장이자 군 장성인 마누엘 케베도와 베네수엘라 국경원장, 경찰청장, 대통령 경호대장 등 베네수엘라 핵심 인사들에 경제 제재를 가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대개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군부 핵심 인사들은 대개 우고 차베스가 1997년에 창당한 정당 ‘제5공화국운동’(MVR) 출신으로, 차베스-마두로 집권 20년 동안 군부와 여당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 주요직을 거쳐 왔다. 이들은 대중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PDVSA를 비롯해 광업·운송·항만 등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사실상 반동적 쿠데타를 부추기며 치킨게임을 걸고 있다. 트럼프의 위험한 게임 때문에 수천만 베네수엘라 대중은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베네수엘라 우파를 지지한 데다 이런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까지 옹호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트럼프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우파 정

부들과 손잡고 외교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미주기구(OAS), 리마그룹 등 역대 외교 테이블을 “핑크 물결” 좌파 정부 집권 당시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브라질 국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여기에 적극 보조를 맞추며 라틴아메리카 우파 정부들을 결집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2월 20일 보우소나루 정부는 미국의 물자 반입 예정일인 23일에 맞춰 브라질-베네수엘라 국경을 통해서도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민주당도 마두로 정부를 “도둑 정부”라고 부르며 외교 압박과 추가 경제 제재로 마두로를 권좌에서 축출하는 것을 지지한다. 향후 몇 주 동안은 “군사 개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지만 말이다(2월 14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중시한다는 면에서는 트럼프와 민주당은 이해를 공유한다.

적의 적은 친구?

지금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제멋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긴장 관계 때문이기도 했다.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초기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본지가 지적했듯(판련 기사: ‘베네수엘라 쿠데타 사주하는 미국: 그러나 중국은 믿을 수 있을까?’), 한 편의 제국주의를 다른 편의 제국주의로 견제할 수 없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국이 과이도와 협상 중이라는 2월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가짜 뉴스”라고 비난한 지 나흘 후, 과이도 자신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러시아 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7일에 러시아의 주요 은행 가스프롬뱅크가 PDVSA 보유 계좌를 동결했다.

정국이 분수령으로 치닫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의 잇속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대륙에서 가장 반동적인 친미 우파가 마두로를 몰아내고 집권하면 그나마 남은 친서민 개혁이 모두 회수되고 잔혹한 탄압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

브라질의 좌파 개혁주의 정당 사회주의와해방당(P-SoL)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당들은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해 평화협정을 호소했다. 긴장이 고조돼 있고 양측의 의지가 명확히 충돌하는 지금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픈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으로 시간을 조금 벌더라도, 베네수엘라 우파와 미국 제국주의는 그 시간을 다음 번의 더 잔혹한 공세를 위한 준비에 쓸 것이다. 차베스 집권 이래 20년 동안 늘 그랬듯이 말이다.

베네수엘라 혁명적 좌파 단체 ‘사회주의 물결’은 2월 19일에 성명을 발표해, 제국주의의 간섭을 규탄하고 아래로부터의 행동을 호소했다. 베네수엘라 대중의 힘으로 우파 쿠데타를 저지하고 진정한 변화를 쟁취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사진 포커스

화려함 속의 그늘

양골라 난민 가족 루렌도, 바테체 씨 부부의 어린 자녀들이 천진한 눈빛으로 유리창 밖 면세점 거리를 바라 보고 있다. 이 가족은 한국 정부의 입국 불허로 50여 일째 인천국제공항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조승진





대우조선 노동자들, 매각 반대 투쟁

왜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희생돼야 하나?

박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높은 지지로 매각 반대 파업을 결의했다. 2월 18~19일 진행된 정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20일 열린 중식 집회에는 3200여 명(노조 집계)이 참가해 뜨거운 분노와 투쟁 열기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평소 집회에 400~500명이 모인다니 상당히 많이 모인 것이다. 노조는 “정규직, 사무직, 사내하청 누구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며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본지 정기구독자인 한 노동자는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다. “1987년 말고, 근래에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어요. 조합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사무직도 많이 보였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자기들끼리)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관리자들도 매각을 반대하고, 우리 부서의 직장, 반장도 오늘 집회에 나왔으니까.”

노동자들은 정부의 매각 방침에 불만을 토했다.

“지난 4년간 원하청 노동자 2만 명이 회사를 나가고, 임금을 반납하고, 복지를 축소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

사를 정상화시켜 놔어요. 이제 좀 제대로 살겠다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각을 한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인력 감축이 없을 거라는 정부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가 한두 번 사기를 쳤어야지. 20년째 매각 얘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속도 있게 추진되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다간 정말 사달이 나겠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몇몇 사업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기술연구나 R&D, 설계 부문의 고용 불안이 심각합니다. 겹치는 사업 분야가 많아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큼니다. 현대중공업이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삼호중공업이랑 물량을 나누는 것처럼, 대우조선의 물량을 빼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해양(플랜트 부문) 시운전부에 있는데, 요즘 일감이 없어요. 시운전 나간 지도 오래됐어요. 근데 매각이 되면, 우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대우조선의 해양 조합원들은 일감이 많은 상선 부문으로 지원을 나갔어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해양 조합원들을 대거 휴직 보내지 않았나



2월 20일 정의행위 찬반투표 직후 중식 집회에 평소의 여섯 배 이상 집결한 대우조선 노동자들

2월 20일 정의행위 찬반투표 직후 중식 집회에 평소의 여섯 배 이상 집결한 대우조선 노동자들

요? 합병되면, 현대중공업이 우리 조합원들은 가만히 놔둘까요?”

“이번 매각은 파급력이 큼니다. 지역의 기자재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거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될 겁니다. 우리 노동자가 살 길은 파업밖에 없습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현대중공업에서도 노동자들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정부와 사측의 목표는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인수 합병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업 부문의 통폐합·조정으로 인력 감축이나 강제 전환배치가 추진될 수 있고, 임금·복지 삭감, 외주화 등이 확대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지부도 2월 20일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노동자들은 싸울 힘이 있고 정치권 분열 이용해 싸울 수 있다

대우조선의 압도적 파업 가결과 성공적 집회는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보여 준다. 무엇보다 지금의 투쟁 지형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 점을 이해하고 단호하게 싸우면 매각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첫째,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른 업체들보다 실적이 좋은 대우조선은 그동안의 구조조정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을 멈추고 마비시킨다면 정부와 사측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

둘째,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투쟁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구나 수년간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된 거제-경남 지역에선

대우조선 매각 문제가 중요한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이 지역의 진보정당들(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노조와 함께 매각 반대를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이 “대우조선 매각은 철저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나섰고, 민주당 거제시장이 시민대책위에 우호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거제 지역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일방적 매각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대중 정서 때문이다. 올해 창원 재보궐 선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분열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들

과 협력하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거나, 그들에 기대 투쟁을 미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투쟁을 전진시키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해로울 수 있다.

반면교사 삼아 볼 만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한국GM이 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군산·인천의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광범한 대중의 여론을 의식해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엠지부 지도부는 투쟁을 발전시켜 지배자들의 균열을 더 심화시키고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것을 통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다. 민주당은 공장 폐쇄를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했다. 그리고 결국 노조 지도부는 파업한 번 못 해 보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했다.

경남 지역의 민주당도 지난해 STX조선, 성동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고용을 지키는 대신 임금을 양보하라’며 끔찍한 양보를 압박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금도 매각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지자체와 협력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분열하는 상황을 이용해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노동자들이 정치적 초점을 형성하면서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진짜(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이런 투쟁에서 효과적인 대안은 대우조선을 매각하지 말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구 국유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고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이미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13조 원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국유기업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을 진짜 국유화, 영구 국유화해서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매각설이 나돌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매각이 성사되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려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각을 전제하는 ‘일시 국유화’가 아니라 영구 국유화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매각, 공장 폐쇄, 대량해고 등 구조조정에 직면해 노동자들이 싸울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장을 점거해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노동자들을 단단하게 결집시키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게 만들어 정치적 압력을 키우는 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지금 정부와 현대중공업 사측은 수개월의 물밑 협상을 끝내고 빠르게 단호하게 매각-인수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도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그런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분노를 터뜨리는 광범한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모으며 정부와 사측을 물러서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